

# “서울역 쪽방촌 개발 등 반대여론, 대화·설득으로 풀 것”

## 변 창 흠 국토부장관 본지 단독 인터뷰

2·4 공급대책 관련 지역 조합·주민 반대해소 입장 전해  
“쪽방촌 사업 지구지정 여부 공시 전 공개는 중범죄 해당”  
“정비사업 등 공급대책, 지자체·주민 등 집중 설명회 개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대책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85만가구 서울 3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조합과 주민들은 반대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 설명회 진행

변 장관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공정비사업 등 공급대책과 관련한 반대여론은 해당 지역 내에서 집중 설명회를 개최해 대화를 통해 풀어갈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은 아직 본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각 지자체의 구청장, 실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고,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올려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 재개발(50~75%)보다 낮게 책정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1년간 ‘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후보지 8곳은 ▲신문로2-12 ▲양평13 ▲양평14 ▲봉천13 ▲신설1 ▲용두1-6 ▲강북5 ▲흑석2 등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다.

이곳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일부 주민들은 한 때 사업 반대를 주장하

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흑석2구역과 봉천13구역 등은 정부와 협의점을 맞춰가며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역 쪽방촌 개발 반대 심화

현재 가장 큰 당면과제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 개발 사업 발표 후 불거진 지역 토지·건물주들의 반대 여론을 해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내 토지·건물주들은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공공정비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개발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사업은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쪽방촌 개발사업은 감정평가를 거쳐 현금보상을 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

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후암특례1구역 추진위원회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현금보상에 반대하며 결사반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변 장관은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며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약 25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주요 ICT 법안 815건 중 73%는 규제”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참가자 규제해소 한 목소리  
“샌드박스 정책, 샌드가 아닌 콘크리트”

코로나19가 촉발한 팬데믹 시대에 ICT 분야의 규제를 풀어 산업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 세계에서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 국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대한

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 심우민 교수가 ‘20대 국회 ICT 입법활동 평가 연구결과’를 주제로, 규제개혁 당당하게 대표활동가인 구태언 변호사가 ‘대한민국 ICT 규제의 현주소-코로나19 뉴노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를 좌장으로 목포대 법학과 김도승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김준모 과장, 피와이에이치 박용후 대표, 한국공유경제협회 조산구 회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심우민 교수는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 분석을 통해 국내 ICT 관련 법안에 대한 현황을 소개했다. 심 교수는 “주요 ICT 관련 법안 815건 중 73%가 규제 법안이었다”며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ICT 산업의 현실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언론에서 n번방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단시일 내에 선정적인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된다”며 “그렇다고 규제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발의된 법안 중 69%가 미반영된 채 폐기되어서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입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시장 성장의 가능성은 일찌감치 봤음에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클라우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원격진료 등 ICT 관련 산업들이 전 세계에서 뒤쳐져 있다”며 “정부는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부처별로 규제 대상을 먼저 선정하기 위한 경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모든 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닐로그 시대일뿐더러 정부가 책임을 지지도 못한다”며 “기업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불필요한 국가 인증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장면 캡처. (왼쪽부터) 목포대 법학과 김도승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김준모 과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정준화 박사

/구서윤 기자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산구 회장은 “공유숙박이 등장한 지 10년이 됐고, 아직도 한국에서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는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많은 국내 이용자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고, 에어비앤비의 자산 가치는 고공행진 중”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내불남로 같다”고 꼬집었다. 국내 기업이 하면 불법이지만 글로벌 기업(다른나라 기업)이 하면 로망과 혁신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샌드박스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샌드(모래)박스가 아니라 샌드로 만든 콘크리트 박스라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김준모 과장은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회적 갈등이 심한 경우 샌드박스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지정되더라도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과기정통부, ‘K-사이버방역’ 3년간 6700억 투입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목표

정부가 ‘K-사이버방역’ 사업에 향후 3년간 67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을 1.5% 이하로,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16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에서 이 같은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처럼 디지털공간도 튼튼한 ‘방역 체

계’를 구축해 디지털경제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안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주요 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지금까지 신고를 통해 수집하던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약 2만개)와 디지털 서비스들이 사전에 위협을 탐지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또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

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사고 분석·조사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해 실제 스마트빌딩, 물류센터, 무인상점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디지털융합 신산업, 비대면 보안기

술 등에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하고 2023년까지 3000명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재직자 등)을 추가 양성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략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전략과 함께 디지털 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됐다”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꽂 꽂 피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

인크루팅/육성 전문실장 : 임언정 (문자환경)

010-3043-3574